

해방 60년 한반도의 과거, 현재, 미래

- 출처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저자 :
- 발행일 : 2005년 8월 2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해방 60주년의 회고와 전망

박 원 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1. 잠깐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

- 전시대를 평가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광복 60주년이다. 사람의 삶으로 따진다면 회갑의 나이다. 30년을 한 세대로 친다면 두 세대가 지나갔다.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일제하를 힘겹게 살았던 부모님은 이미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나 자신도 이미 50대에 들어섰다. 벌써 내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20대가 되었다. 곧 이들은 결혼하고 조만간 나도 할아버지가 될 것이다. 인생이 그러하듯 우리 현대사로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10명의 대통령이 나타나고 사라졌다. 제1공화국에서 6공화국까지, 그리고 다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으로 이어져 왔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숨 가쁘게 그 시대를 살아왔다. '격동의 세기'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해방과 더불어 분단, 좌우갈등, 전쟁과 학살, 독재와 저항, 혁명과 쿠데타가 오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명멸했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지난 60년이 1천년 신라왕조나 5백년 조선왕조보다 더 크고 많은 사건들로 수놓여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때로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또 때로는 간담이 서늘하고 참혹하고 해피망측한 일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 60년 동안 비명으로 죽어나간 사람이 그 얼마이며 강제로 또는 전쟁과 재난으로 잃어버리고 파괴되어버린 재산이 그 얼마인가.

이렇듯 경천동지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 정신이 얼떨떨한 상태이다. 그러나 어느 사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려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상태로 지나가곤 했다. 나는 일본을 여행하면 동경의 큰 시점들을 순회하곤 한다. 어떤 사건에도 몇 권씩의 책으로 정리되어 나오는 것을 본다. 정신대문제에 관한 강연차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을 들었다. 그 대학의 어느 법대생이 정신대문제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다면서 조언을 구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신대문제는 수십 편의 논문의 주제가 되었다. 그 후 미국의 아시아학회에서 한 세션이 바로 이 문제에 관해 열렸다. 아무런 평가도 없이, 생각도 없이 과거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 과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며 따라서 올바른 미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뜻한다.

과거 우리 민족은 '역사'를 중시해 왔다. 고대국가의 완성은 흔히 '국사'의 편찬으로 상징되었다. 한 왕조가 끝나면 그 다음 왕조는 그 전시대를 총정리하는 역사를 썼다. 삼국사기, 고려사가 그러하다. '동사강목'(東史綱目)을 저술한 안정복은 전시대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의 역사방향을 정립하려 하였다.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흔히 역사의 연구가 채택되었다.

그동안 현대사에 대한 연구가 없지는 않았다. 역사학자 뿐만 아니라 정치학자, 사회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축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 박정희시대의 공과에 대한 논쟁이 한참이지만 그 시대의 총체적 상황이 충분히 드러나고 검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변변한 개관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제 좀 더 차분히 우리가 지내온 과거를 돌이켜 볼 때가 되었다. 미시적이고 각론적으로 지나온 역사를 지밀하게 살피고 연구하고 평가해야 한다. 동시에 그 바탕위에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해야 한다. 이제 조금은 숨을 고르고 앉아서 지나온 저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점검해 보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광복 60주년 -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바이다.

2. 고난의 20세기를 헤쳐나온 민족

-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

지난 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비극적인 시대였다. 국권상실·식민지하에서의 착취·학살·차별·민족말살, 분단과 전쟁, 독재와 빈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광복 6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민초들의 고난의 삶은 필설로 다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악조건과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제 우리는 외형상 경제적 풍요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60년대 이후 시작된 경제발전전략

은 많은 시행착오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경제부흥을 이룩해냈다. 그 개발독재의 인권유린과 정치적 압제에 저항한 지식인과 민중의 저항은 그 이후 마침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이로써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토끼를 우리는 잡게 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면 지난 60년 동안 한국인들이 이룩한 이 두 가지 성취는 자랑할만한 일이다.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남미나 동남아시아, 동구권과 러시아 등을 비교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다함께 성취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재벌과 특권계층의 발호와 정경유착을 비롯한 부패구조를 낳았다. 경제성장주의는 금전만능주의의 사회적 악폐를 가져왔음은 물론 경제적 빈부격차와 그 갈등을 불렀다. 이러한 후유증은 단지 그 성장과정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대해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른바 '개발독재'론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권과 자유, 배분과 형평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은 개방이후의 동구권과 중국, 여러 제3세계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 성장의 후유증을 생각하면 과연 이들 나라의 올바른 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우리가 좀 더 인권과 자유, 분배와 사회정의라는 가치와 경제성장을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성장이 조금은 둔화되었을지 몰라도 그러한 균형성장이 이루어졌다면 그토록 심각한 사회갈등과 대량 인권의 침해와 부정부패 등의 후유증이 훨씬 경감되지 않았을까.

3. 갈갈이 찢겨진 나라

- 노사갈등 · 지역갈등 · 이념갈등 · 세대갈등을 극복해야

자세히 우리사회를 들여다보면 온통 갈등과 분열로 나라가 시끄럽다. 분단된 이 남한 땅에서도 지역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정당간의 갈등이 증폭되어가고 있다. 구심력은 적고 원심력이 크다. 원래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시장의 자유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등과 분열 양상은 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성장통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이념적 갈등이 크다. 이념갈등은 대체로 세대간의 그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경제성장시대를 주도하고 전쟁을 경험한 노장 세대는 새로운 민주화운동을 이끌고 주도한 청장년 세대와는 많은 의견의 차이를 가진다.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론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노동과 자본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다. 사실 사사건건 다투고 싸운다. 과거 정치권의 정략적 이용으로 골이 깊어진 지역간

의 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지역감정의 도화선이 된 박정희정권, 그 이후 지역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근거가 되었던 김영삼·김대중정권도 모두 사라졌지만 이 지역주의는 쉽게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당연한 일이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의견이 일치되는 나라가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른 의견을 어떻게 통합·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 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른바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의 방안은 다양하다. 보다 더 권위있고 신뢰있는 분쟁해결기관의 설치, 기존의 사법부와 각종 중재·조정기구들의 개혁, 대학 내 분쟁해결학과 설치와 분쟁해결전문가들의 양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연구와 해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실무적인 방법 외에도 국회나 지방의회가 이러한 분쟁과 갈등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야 한다. 정당들은 불행히도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더 하고 있다. 이러한 당리당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정해 내려면 기존의 청문회제도를 활용하여 이익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가운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단체들 역시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보도와 논의를 해 내고 그것에 기초한 최선의 대안들을 찾아내려 한다면 이 사회의 갈등과 분쟁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노사갈등 역시 아직 우리가 갈등해결에 미숙한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약자의 집단적인 권리로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기업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주나 경영진은 노동조합을 적법하고도 적절한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아왔다. 오만하고도 고압적인 자세로 노동자들을 '일하는 기계'나 '머슴' 썸으로나 생각하였으니 노동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리가 만무하다. 노동조합 역시 사회 전반적인 환경과 조건을 무시하고 지나친 요구를 하면서 합의 지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사실 오늘날 대기업의 임금수준은 이미 선진국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부정하는 강경일변도의 협상태도는 실질적인 협상을 어렵게 한다. 더 큰 문제는 개별 단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임금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 이 나라 서민과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택·전세문제, 사교육비용 문제 등은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마땅히 노동조합이 이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여야 함에도 이런 문제에 큰 관심과 개입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아무리 임금인상에 성공하여도 생활형편이 크게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사분쟁을 해결하고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데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회계와 경영의 투명성과 책

인성, 경영진의 도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필요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함께 원원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4. 민주주의, 아직도 더 가야할 먼 길

- 법치주의와 '게임의 룰'이 사라진 사회

“민주주의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라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모두 쟁취한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가치와 깃발을 지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느 샌가 그것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우리가 이룩해야할 민주적인 가치와 제도는 아직 한참 멀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와 내용은 법치주의다.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는 내용을 핵심가치로 하는 법치주의가 과연 우리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을까. 법은 진정으로 재벌과 권력, 언론 등 우리 사회의 가장 힘있는 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대답은 부정적이다. 재벌의 회장은 상식적으로 누가 보아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대량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제공이나 불법적 기업 활동에도 소환조차 되지 않기가 일쑤이다. 대규모의 분식회계가 빈발하고 그때마다 소극적인 수사와 전문경영인의 구속으로 끝나기가 보통이다. 검찰과 사법부의 판·검사나 직원은 “손이 안으로 굽기” 일쑤여서 제대로 엄벌되는 경우가 없다. 사건이 커지고 사회적으로 비난이 가중되면 그때서야 ‘옷 벗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폭로되고 수사되어온 병역비리를 보면 그야말로 돈 있고 ‘뻐’ 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은 병역에서 면제되고 힘없고 뻐 없고 돈 없는 가난한 서민들만 병역의무를 져왔다는 사실을 판이하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 법치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수백·수천억까지 커지는 부정부패와 비리의 뉴스를 들으며 이 나라 민중들의 가슴에는 절망과 분노가 자란다. 재벌기업, 고급관료, 정치인들이 벌이는 정경유착과 부패의 고리는 끝이 없어 보인다. 이러다 보니 일반 시민들조차 법에 대한 불신과 경시에 익숙해졌다. “법대로 하면 손해”라는 견해가 조사시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90%까지 나온다. 이쯤이면 법치주의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사실 이 사회에는 사기꾼이 판치는 사회이다. 어디를 둘러보나 가짜이고 허위·과장 광고가 판친다. 음식이나 식품에까지 가짜 고춧가루, 발암물질을 넣기 일쑤이다. 광고를 믿고 샀다가는 낭패하기 쉽다. 평생 모아 집을 샀는데 중간에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회사나 그 하도급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미 낸 계약금 중도금 날리는 사태나 설사 입주하는데 성공했다라도 비새고 벽에 금가고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숭하다. 총체적 부실사회 - 그것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불러왔다. 법 앞의 만인의 평등, 성역의 제거, 엄정한 법집행, 법에 대한 신뢰, 공정한 법의 제정과

운용이 절박하다.

5. 우리의 미래를 붙잡는 과거

- 청산해야만 할 과거

최근 몇 년간 '과거청산'이라는 말처럼 흔하게 된 단어도 없다. 어디에서도 과거청산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만큼 우리가 청산해야 할 '과거'는 엄청하고도 다대하다. 분단과 전쟁, 독제와 탄압, 그리고 학살과 약탈은 지난 해방 60년을 상징하는 음울한 단어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들은 개인과 집단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지왔다. 특히 해방직후에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살상당한 민간인이 1백만 명이 넘는다는 주장은 과거 2차세계대전 당시 전유럽에 걸쳐 살상당한 유대인이 6백만 명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얼마나 큰 비극이 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는지 잘 알 수 있다. 제주·여수·함양·산청·거창…… 전국의 해아릴 수 없는 지역에서 자행된 이 끔찍한 만행은 아직도 많은 유족들의 가슴에 상채기를 남기고 있다. 학살의 극단적인 인권침해는 아니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이도 구금되거나 직위가 해제되거나 또는 재산을 빼앗긴 경우도 허다하다. 독재정권의 눈 밖에 난 수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였다. 다행히 최근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하에서 각종 과거사청산위원회들이 생겨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부분적으로 사과, 명예회복,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진전은 지지부진하고 불완전하기만 하다. 철저한 진상조사, 정부와 관련자의 진실된 사죄, 가해자와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응징,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그리고 원상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조치 등이 필요하다. 섬세한 눈으로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일이 절박하다.

실상 더 한심한 일은 일제하의 민족반역자들의 과거가 제대로 응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독립된 조국의 중요 직책을 독차지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에 의해 유린된 주권을 회복한 새로운 광복 조국에서 당연히 과거 친일행각을 벌임으로써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 처벌 또는 배제되고 주권회복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건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주체가 됨으로써 민족정체성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이다. 이들은 역대정권의 수족이 되어 인권탄압에 앞장섬으로써 친일의 죄과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죄악을 계속해서 저질렀던 것이다. 우리 해방 60년의 역사가 왜곡되고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전적으로 친일부역자 청산이라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꿴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참 늦은 일이지만 이 일은 여전히 현재의 과제로서 중요한 일이다.

6. 통일의 비원

- 분단된 반쪽을 극복해야

분단은 단순히 영토의 절반이 절단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상호 적대와 대립은 마침내 한국전쟁을 낳았고 그 갈등과 전란 속에서 수백만이 목숨을 잃었다. 상호의 사회를 극단적이고도 기형적인 제도와 의식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남쪽에는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권위주의를 낳았다.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민족사의 온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분단된 상태에서는 언제나 과도기이며 기형적일 수밖에 없다. 수천 년 동안 단일국가로 살아온 한민족이, 한 국가가 분단민족, 분단국가로서 살아갈 수는 없다. 지난 60년 동안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감으로써 이미 서로 다른 체제가 성립되었지만 여전히 그것은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더구나 수백만의 가족이 강제로 이산되고 상호간에 만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접촉하고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이 비인간적 상황은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태도를 놓고 논란이 많다. 이른바 '남남갈등'은 깊어저만 간다. 상호 적대와 전쟁의 당연한 부산물이다. 그러나 통일과 공존과 협력의 길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다. 2차세계대전의 결과 생겨난 분단국가들로서 통일되지 않은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다행히 최근 남북관계는 핵문제와 6자회담의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착실한 교류와 화해를 이루어왔다. 햇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의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평화조약으로의 전환, 상호 대표부 교환, 군축의 실시, 대규모 교류와 협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확고한 평화체제 위에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7.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 비전과 컨텐츠가 없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신흥산업국이 되었다. 지난 60년대 이후 각고의 노력과 경제발전의 주력한 결과이다. 이제 OECD회원국이 되었고 세계 10대 교역국이 되었다. 4천8백만의 인구로 보더라도 적은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벌어지는 온갖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과연 우리 스스로가 우리사회체제의 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를 자문하게 된다. 어느새 커진 몸집에 비해 우리는 이 커진 규모를 담당하고 매니지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륜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정당들은 막대한 국고보조금까지 받고 그 가운데 일정비용로 정책연구에 쓰도록 법제화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연구소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국정위의 논의과정이 정책의 생산과 정책적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집권세력은 정책으

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다. 3개월간의 인수위원회의 구상만으로는 한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다양한 정책의 생산과 조정을 하기 어렵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더 한심하다. 적어도 수천억 원씩의 예산을 가진 일선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주민들과 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실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 책임과 권한을 맡길 만큼의 충분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 동시대인들이 피땀 흘려 번 혈세들이 낭비되기 마련이다.

결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일정 정도를 이룬 우리로서 과연 앞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큰 비전과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채워낼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비전은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전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을 때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막연한 부국강병론이 우리의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될 수는 없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그때까지 20% 이상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다. 여기에 집중되는 정부의 예산과 노력, 시민들의 힘을 끌어내는 조치 등으로 말미암아 독일은 이미 대체에너지 분야의 최고 선진국이 되었다. 독일은 친환경적인 사회를 이룩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하나 개발한 것이다.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각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치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구한말 서유견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밀려오는 서구문명을 따라잡으려는 일부 선각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 시간부족 때문에 결국 식민지의 운명을 맞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기초역량은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학습과 연구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절박하다. 오늘날 선진 서양제국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의 예를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공부하는 백성이 산다'는 말이 오늘날처럼 실감나는 때는 미처 없었다.

해방 60주년. 이제야말로 새로이 출발할 때가 되었다. 진정 이제 시작이다.